



하수철 순천소방서 서장

규제만이 답일까

작년 12월 10일부터 소방청은 소방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통해 건축공사장에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용접작업 등을 하는 경우 즉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소방서 단속만이 위반 사항을 발견해도 소방서장이 해당 시공사에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어긴 경우에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다. 소방시설법의 개정으로 인해 즉시 제재가 가능해져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이다.

임시소방시설이란 부유 분진, 불꽃, 열, 가연성 가스 등이 발생하는 작업을 하는 공사장에 설치해야 하는 시설로 종류로는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이 있다.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은 모든 공사장에 설치가 강제되는 것은 아니며 공사장 규모, 지하층, 무창층 유무 등에 따라 달라진다.

소화기의 경우 모든 공사장에서

용접·용단 등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작업을 진행할 때에는 작업장 5m 이내에 소형 2개, 대형 1개를 구비하여 유사시에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단순히 소방시설을 강제하는 것만으로는 화재예방을 담보할 수 없다는 우려에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장의 경우 화재감시자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화재감시자는 사업주가 지정하며, 공사현장에서 화기취급사항을 전반적으로 감독하고 임시소방시설이 설치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근로자를 즉각 대피시키고 화재사실을 사업주, 소방서에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규제를 강화한 뒤 공사장 화재발생현황은 어떨까. 지난 2월 영등포공사장화재와 부산 대십도 공사장화재, 3월 속초 주상복합 공사장화재, 4월 남양주 공사장화재, 같은 월 남양주 오피스텔 건축현장화재, 지난달 판교 건물 공사장화재 등 한

달이 멀다하고 대형 공사장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전남에서는 1월부터 5월까지 공사장화재가 13건 발생하였고 올해 동기간에는 3건이 증가한 16건이 발생했다.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화재감시자가 제 역할을 한다면 화재가 발생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발생현황과 통계는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

공사장의 이면을 들여다보자. 사업주는 공사단가를 낮추기 위해 저렴한 가연성소재의 건축자재를 써서 단기간에 공사를 끝내려 하고 화재감시자는 그런 고용주의 기대심리를 외면하기가 쉽지 않다. 관련규정은 갖춰져 있으나 작동여건이 녹록치 않은 것이다.

임주예정자를 화재감시자로 지정하면 어떨까. 화재감시자가 화재보험사 직원이라면, 임주예정자는 건물이 안전하게 지어지길 원하고 화재보험사는 화재가 발생하면 막대한 액수를 보험금으로 지급해야하니, 화재감시업무를 맡게 된다면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다. 이해관계가 상충되기 때문에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견제를 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안전을 두고 대립하는 구조를 만들어야만 할까. 그리고 규제는 얼마든지 신설할 수 있겠지만 규제를 강화하는 것만이 능사일까. 규제는 한 번 생기면 사라지기 쉽지 않다. 1997년 이후 정부에서는 규제일몰제도(規制日沒制)를 시행하고 있지만 공사장에서 화재가 끊이지 않는 현시점에서 규제가 강화될지언정 완화되리란 요원해 보인다.

희망은 있다. 관계자들이 공공의 안전을 위해 편익 기대수준을 낮추고 자정능력을 갖춘다면 규제가 완화된 여지가 있는 것이다. 규제가 줄어들면 장기적으로는 공사부대비용 감소로 이익을 더 누리게 되지 않을까. 헌법 제 37조 2항에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다.

이에 따라 국회는 공공의 안전(공공복리)을 위하여 소방시설법을 제정하여 관계인의 사익추구를 제한하고 있다.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화재감시자 미배치 등으로 공사비용을 줄이고 공사기간을 단축하여 얻는 이익은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관계인은 명심해야겠다.



박임규 보성경찰서장 총경

노인학대근절, 건강한 사회 위한 첫걸음

우리나라의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생활 수준의 향상 및 의학 발달로 인해 사망률이 감소하여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1582만명) 중 15.7%를 차지하고 있는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노년층 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며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가 되고 있다.

현재 전라남도의 경우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전체 인구(1,884,455명)의 약 23.5%가 되는 초고령 사회(2020년 기준)로 들어서고 있다.

전남 인구 중 4명중 1명이 고령자이며, 그만큼 노인학대 관련 범죄 또한 큰 사회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노인학대의 약 85%가 가정 내에서 발생하였으며, 학대 가해자의 74%가 자식, 배우자 등 친척이었으며, 가정

이 아닌 노인 보호시설에서의 학대 사례 또한 2019년 대비 27.9% 증가하였다.

하지만 이는 신고를 통해 학대로 인정된 사례들이며, 실제로 밝혀지지 않은 학대 또한 이보다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실제 2020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7.3%가 노인학대를 경험했다고 답하였다.

UN과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하여 6

월 15일을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로 지정하였고, 이에 우리나라 또한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2017년부터 노인 인권 및 학대 예방을 위해 “노인 학대 예방의 날”을 지정하였다.

또한 2021년 현재, 6.15 ~ 7.15 기간 동안 노인학대 예방·근절 추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노인 학대의 유형으로는 신체적 손상(고통,학대)을 유발하는 신체적 학대, 비난·모욕·협박 등의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유기 등이 있으며, 이러한 행동을 목격하거나 노인 학대가 의심된다면 즉시 112나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또는 노인학대 신고 앱 ‘나비새김(노인지킴)’로 신고함으로써 노인학대를 예방할 수 있다.

‘정남진 장흥한우’ 위상 및 가치 제고 방안

불과 1년 6개월 전 축산사업소 명품한우팀에서 근무하기 전까지는 장흥군 한우 사육두수가 전남 1~2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장흥군에서 출하된 한우가 전남에서 손꼽히는 고품질(1+등급 이상 비율) 한우라는 사실도 새롭게 알게 되었다.

한우산업은 장흥군 소득 분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실질적인 대표 품목(1.828농가·55,936두/2021. 6. 10. 기준)이다. 2020년 축산업 조수익은 3,803억 원, 순소득 680억 원, 한우산업은 조수익 3,075억 원, 순소득 609억 원 정도다.

축산업의 대부분 소득을 차지하는 한우산업의 발전은 축산농업인 특히 한우농가의 열정과 노력으로 일궈 낸 큰 성과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축산업은 대외적으로 많은 변화에 직면하고 있으며 FTA 체결(2012. 3. 15. 발효)로 축산물 수입 개방과 단계적 국가별 관세 철폐로 쇠고기는 2029년까지 완전 무관세로 수입되어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모색이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대내적으로는 구제역·AI 등 악성 가축 전염병의 발생 증가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한우는 일정 수준의 자급률을 유지하고 있고 수요는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소비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고급육(肉)을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기가 기회이라는 말이 있다.

누군가는 큰 아픔이지만 다른 누군에게는 또 다른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위기를 기회로 잡으려면 앞으로 다가올 상황을 철저히 분석·대비·점검해야 된다.

전남 최대 한우 사육 규모와 한우고기 고정 판매처인 장흥토요시장의 감정을 활용하여 ‘정남진 장흥한우’ 고급육 브랜드를 육성해 나간다면, 축산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소득 증대로 한우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이 가능하리라 본다.

장흥군은 ‘정남진 장흥한우’ 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해 2020년 7월 2일에 ‘정남진 장흥한우 보호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고, 한우 우수 브랜드 인증을 위한 주요 심사 기준 ① 혈통등록(종축통일) ② 사료 급여 체계, 출하 시기 등 통일된 사양관리 ③ 농장의 사육환경, 위생·안정성 준수 여부 ④ 브랜드육 유통실태 등 도축, 가공, 유통 등을 마련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거쳐 브랜드 참여 농가를 모집하고 교육도 실시했다. 올 하반기 브랜드 육(肉) 판매를 목표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장흥군은 고급육(肉) 브랜드사업으로 나아갈 준비를 갖췄고 이제는 브랜드사업에 치중해야 할 때이다. ‘정남진 장흥한우’ 브랜드가 대내외적으로 성공하려면 행정과 참여농가, 축협 및 브랜드사업단 등이 각각의 역할을 잘 이해하고 수행해야 한다.

각자의 위치에서 긍정적 마인드로 전국 최고의 한우브랜드가 된다는 믿음을 가지면서 최선을 다해야겠다.

신흥준 / 장흥군 축산사업소 주무관

호남신문 www.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 서구 운천로 213 스카이랜드 309호	
회장·발행인·편집인 김 평 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 선 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정평 13길 19	(061) 727-3123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들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다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